

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

2012. 5

전	국	경	제	인	연	합	회	한	국	산	업	기	술	진	흥	협	회
대	한	상	공	회	의	소		한	국	중	견	기	업	연	합	회	
중	소	기	업	중	앙	회		벤	처	기	업	협	회				

- 국내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 GDP대비 R&D 투자비 비중은 3.74%(43.8조원)로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
- R&D 투자액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절대적인 규모나 누적투자비는 선진국에 비해 작은 수준으로, 규모를 늘리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 * GDP대비 비중은 이스라엘 4.25%, 핀란드 3.84%에 이어 세계 3위이나, 금액은 미국 3,981.9억 달러('09), 일본 1,690.5억 달러('09), 독일 925.9억달러('09), 중국 849.3억 달러('09)보다 낮은 379.3달러('10)를 기록

[연도별 국내 R&D 투자 현황]

(단위: 억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R&D 투자비	241,554	273,457	313,014	344,981	379,285	438,548
증감률	8.9	13.2	14.5	10.2	9.9	15.6
GDP대비 R&D 비중	2.79	3.01	3.21	3.36	3.56	3.74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0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며,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R&D 투자 유인이 중요함
- 민간 기술개발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업 R&D 투자가 국가 전체 R&D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국내 기업 R&D 비중은 OECD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

[국가별 기업 R&D 투자 현황]

(단위: %)

구분	한국('10)	프랑스('08)	독일('08)	미국('08)	중국('09)	일본('09)
기업 비중	74.8	61.9	67.5	72.6	73.2	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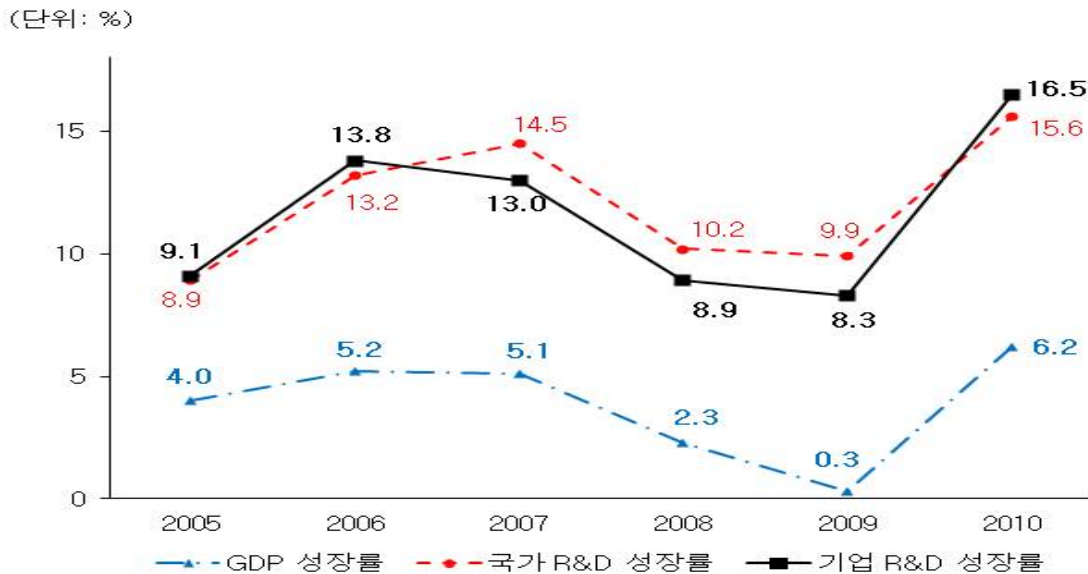
자료: OECD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투자 위축 등이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업의 R&D 투자 확대,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위기 이후 미래도약을 위한 대비 필요

□ 기업 R&D 투자와 국가 경제발전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 R&D 투자금액 증가율은 연간 GDP 실질성장률과 양(+)의 관련성을 나타냄

[연간 GDP 및 R&D 성장률 추이]



○ R&D 투자지출 수요가 증가되는 시기에 각 개별기업의 고용 변화율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 R&D 투자가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도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줌

□ 산업기술 발전 및 기업의 R&D 투자 확대는 조세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며,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정책지원이 유지·확대되어야 함

○ R&D를 통한 기술개발은 불확실성이 높고 공공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지속될 때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 R&D 조세지원이 기업의 R&D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함

○ OECD 회원국 중 R&D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수와 지원 규모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며, 주요국은 세제개편 추진을 통해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R&D 조세지원 제도운영(OECD): 12개국('95) → 18개국('04) → 20개국('08)

* 미국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8%로 낮추고,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영구화 하는 등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12.1월)

* R&D 세금감면혜택이 미미하던 독일과 핀란드 등도 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으로 R&D 세제지원 범위 확대와 공제율 인상이 증가하는 추세

- 기업 R&D 투자가 국가 R&D의 70% 이상을 기여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민간 투자 확대가 필수적임
- 산업계는 기업연구소 및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R&D 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주요 정책 건의과제를 발굴하였음
- 그 중 10건의 정책과제를 하기와 같이 선정하여 건의하는 바,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과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함

2

정책 제언

1. R&D 조세지원제도 일몰 기한 연장

- [현황·문제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R&D 설비 투자 세액공제’ 등 주요 R&D 조세지원제도가 올해 말 일몰 예정
- [개선 방안] 일몰 예정인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주요 R&D 조세지원제도 7건을 현행과 동일하게 연장 시행(3년)
 - * 조세특례제한법(5건)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세액공제’(제10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 특례’(제10조의 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11조),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제12조),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12조의 2)
 - * 지방세특례제한법(2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제46조 1항), ‘연구개발용 수입자동차 취득세 면제’(제46조 제2항)

2.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 [현황] ‘11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 후 5년간 일반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예정
- [문제점] 기존 중견기업의 경우, 일반 R&D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조치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대기업과 동일한 공제율 적용
- [개선 방안] 중견기업 중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이 지출하는 일반 R&D의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신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치인 15%)

3. 중견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 ☐ [현황] '11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 후 5년간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예정
- ☐ [문제점] 기존 중견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조치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대기업과 동일한 최저한세율 적용
- ☐ [개선 방안] 중견기업 중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이 지출하는 R&D 비용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4.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장려세제 도입

- ☐ [현황] 해외 주요 국가(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자 '조세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공제 세액이 납부 세액을 초과하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만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공제 금액이 소멸
- ☐ [개선 방안] 5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장려 세제(조세 환급 제도) 도입

5. 기술의 이전·취득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 [현황·문제점] 기업간 기술 거래 실적이 많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기술 취득에 대한 지원 미흡
- ☐ [개선 방안] 대기업 휴면 특허의 중소기업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고자, 특허(실용신안)의 이전(처분)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취득 세액공제율을 연구인력개발비의 공제율 수준으로 확대(7%→25%)

6.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 ☐ [현황] 최근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기업들은 기술유출 방지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설 투자는 충분치 못함
- ☐ [문제점] 기술유출 방지 설비는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안전 설비투자로 분류되어 세액공제율이 낮아(3%) 투자 유인력이 충분치 못함
- ☐ [개선 방안]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 설비를 R&D 활동으로 간주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포함

7. 중소기업 연구전담인력 연구활동 소득세의 비과세 확대

- ☐ [현황] 중소기업의 신입 연구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문제점] 현 제도는 1인당 지원금 한도가 낮아, 활용 많지 않음(20만원)
- ☐ [개선 방안] 급여합계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소득 공제(근속년수별 차등)

8. 기업 연구소에 대한 교통 유발 부담금 면제

- ☐ [현황] 기업 연구소는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어, 교통 유발 부담금이 부과
- ☐ [문제점] 기업 연구소와 동일하게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정연구기관과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은 교통 유발 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기업 연구소에는 부담
- ☐ [개선 방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하여 기업 연구소에 대한 교통 유발 부담금을 면제

9. 수도권내 대규모 기업 연구소 건축시 과밀 부담금 면제

- ☐ [현황] 연구소의 특성상, 우수 인력 확보, 대학과의 연구 협력 등을 위해 주로 수도권에 대형 연구센터를 설립
- ☐ [문제점] 기업 부설연구소가 인구 집중 유발 시설물로 분류되어 과밀 부담금을 납부토록 규정하여, 수도권내 대형 연구센터 설립시 기업 부담 과중
- ☐ [개선 방안] 수도권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업 부설 연구소를 제외

10. 서비스 R&D 인증제도 도입

- ☐ [현황·문제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R&D 조세지원 대상에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였으나, R&D 성과물의 인증 제도가 제품 기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 영역 및 제품·서비스의 융합 기술은 제외
- ☐ [개선 방안] 서비스 및 제품·서비스의 융합 기술 등 기존 인증에서 다루지 않는 R&D 성과물을 대상으로 한 인증제도 도입

1. R&D 조세지원제도 일몰 기한 연장

□ 현황

- 세계적으로 R&D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수와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 미국의 201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R&D 세액공제를 영구화하고, 대체간소화공제 비율을 14%→17%까지 확대할 계획(U.S. Department of Treasury, '11)
 - * 일본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1~'15)에서 R&D투자 확대를 위해서 추가 세제 우대 조치를 검토
- 대부분의 연구에서 R&D 조세지원이 기업의 R&D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음
 - * R&D 세액공제로 조세수입이 1달러 줄어든 때마다 기업들은 R&D를 위해 1달러 이상 투자한다는 점에서 효과적(Center for American Progress, '12)
 -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만우외(2000), 손원익(2002), 원종학(2005), 김상현·손원익(2006), 김학수(2007), 송종국·김혁준(2009) 등 다양한 연구에서 조세지원이 R&D 투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함
- 기업들은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을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기업 R&D 지원제도 중에서 조세지원제도의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산기협, '10)
 - * 중소 제조업의 R&D 지원제도 활용률은 조세지원이 19.2%로 가장 높았으며, 필요성의 경우 자금지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중기청, '11)
 - * 중소기업은 조세지원의 활용도와 효과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를 가장 크게 요구함(중소기업중앙회, '10)

□ 문제점

-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의 경우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R&D 조세지원제도 상당수가 폐지될 위기에 놓임

□ 개선방안

- 기한이 도래한 R&D조세지원제도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일몰연장

[2012년 일몰되는 주요 R&D 조세지원제도]

제도명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제10조)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해당연구개발비의 20%(중소기업30%) 세액공제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 특례(제10조의 2)	연구개발 출연금은 당해 연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연도에 소득에 포함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제11조)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기업화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 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12조의 2)	R&D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의 사업소득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제46조제1항)	기업부설연구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연구개발용 수입자동차 취득세 면제(제46조제2항)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면제

□ 소관부처 및 관련법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조세특례제한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2.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 현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R&D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제도임
 - * 일반 R&D 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지원금액은 2조 3,106억원('11년 기준)으로 전체 R&D 조세지원의 87.7%를 차지함(기재부, '11)
 - * 대기업의 65.6%, 중소기업의 60.4%가 최근 3년간 동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산기협, '11)
-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 후 5년간 일반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조치를 실시함
 - * 공제율 변화 : 중소기업 25%, 유예기간 3년간 25%,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15%,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10%, 일반기업 3~6%

□ 문제점

- 중견기업의 경우 R&D 투자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R&D 지출은 아직까지 저조한 상태(국과위, '11)
 - * 종업원 300~999명 중견기업의 전체 R&D 투자규모는 2010년 기준 2조 6,675억원으로 전체 기업 R&D투자(32조 8,032억원)의 8.1%에 불과하며, '07년 규모 9.4%보다도 감소(교과부, 국과위)
 - * 종업원 300~999명 중견기업의 R&D집중도(R&D투자금액/매출액)는 1.68%에 불과(전체 기업 평균 : 2.38%)
- 특히 기존 중견기업의 경우 일반 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조치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대기업과 동일한 공제율 적용
 - * 중견기업의 54.5%가 중소기업을 졸업했을 때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세혜택 축소'를 꼽았음(중소기업연구원)

□ 개선방안

- 중견기업* 중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이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수준(15%)으로 신설

* 중견기업의 범위(산업발전법 제10조의 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닐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이 2007년 이후 자산총액 2조원→5조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규모가 큰 대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 소관부처 및 관련법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3. 중견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

□ 현황

-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중소기업에 졸업한 기업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 후 5년간 최저한세율의 단계적 인상조치를 실시함
 - * 중소기업 및 졸업 후 유예기간 3년간 7%,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9%, 일반기업 10%(과표규모 100억원 이하) 또는 11%(1,000억원 이하) 또는 14%(1,000억원 초과)
- 2003~2008년 사이에 중소기업의 0.9%만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반면, 중견기업의 40.9%는 오히려 중소기업으로 후퇴(IBK 경제연구소)

□ 문제점

- 2012년부터 일반기업의 석·박사 R&D인력 인건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예외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이에 중견기업도 석·박사 R&D인력 인건비에 대해 최저한세 규정 적용
- 기존 중견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조치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대기업과 동일한 최저한세율 적용
 - * 최저한세 적용 대기업의 87.8%가 과세소득 기준 100억원 이하 중견기업(국세청, '11)

□ 개선방안

- 중견기업 중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이 지출하는 R&D 비용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

□ 소관부처 및 관련법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4.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장려세제 도입

□ 현황

- R&D 조세지원제도는 특성상 당해연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는데 시간지연이 발생함
- 창업기업의 경우 초기 R&D 투자 등의 노력이 기업의 생존여부를 좌우하므로 시간지연은 지원정책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후 5년간 생산성이 가장 높지만,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은 50%에 불과하여 일반기업보다 낮게 나타남(중기청, '10)
- 이에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다수의 국가에서 연구개발장려를 위해 '조세환급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계획('09~'13)」을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한 적이 있음

[주요국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개발 장려세제(조세환급)]

국가	내용
프랑스	· 3년간 이월공제 후 4년이 되는 해에 잔여금액 환급 ·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5년간 당해연도 즉시 환급 허용
호주	· 당해연도 매출액이 500만달러 이하이거나 연구개발비 합계액이 2만~100만 달러 사이인 기업 대상으로 R&D비용의 30% 환급
영국	· 당기 사업손실액의 16% 또는 R&D 비용의 28% · 당기에 회사가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고용보험금을 한도
싱가포르	· 신설 창업기업이 15만 SGD 이상 R&D비용으로 투자하고, 결손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225천 SGD 한도)의 9%를 현금지원
캐나다	· Small CCPCs*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률 환급 가능 (전년도 과세소득 40만\$ 이하, 과세대상 자본 10백만\$ 이하 기업)

* R&D 세액공제와 R&D 조세환급 방식을 함께 운용

□ 문제점

- 우리나라의 경우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공제만 허용하며, 이후에는 공제금액이 소멸

- 창업 초기에는 수익에 비해 투자가 많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현행 R&D 세액공제 제도는 창업 중소기업의 R&D에 대한 지원효과가 제한적임

* 창업기업 중 적자기업 비중(국세청) : 56.5%('09)→63.6%('10)

□ 개선방안

- 업력 5년 미만의 혁신형 R&D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장려세제(조세 환급제도) 도입 (→ 향후 5년 이내에 이월공제 규정 적용을 통해 조세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

* 대상 : 결손금이 있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

한도 : 당해연도 세액공제 가능금액의 20%(5천만원 한도)

□ 소관부처 및 관련법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조문 신설)

5. 기술의 이전·취득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현황

- 기업의 기술거래 실적이 적으며, 산학협력 유형 중에서 기술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남
 - * 기업의 84.6%가 최근 3년간 기술이전, 기술취득 등의 기술거래 경험이 없다고 응답(KIAT, '09)
 - * 중소기업의 89.4%가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산기협, '12)
- 기업경쟁력의 핵심인 무형자산(지식,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Patent Box' 조세지원제도 운영
 -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식재산(IP)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하시켜 주는 조세지원제도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위스, 중국, 영국('13년 도입예정) 등에서 실시중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한해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2009년 말 세제개편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00분의 3)는 폐지
 - * 중소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
 -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
 - 일몰기한 : 2012년 12월 31일

□ 문제점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2005년 말 폐지되는 등, 기업의 기술거래 관련 조세지원제도가 취약함
 - *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기술비법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조세지원 미흡
 - * '11년 기준 기술취득에 대한 조세지원 금액은 4억원에 불과(기재부, '11)

□ 개선방안

- 대기업 휴면특허의 중소기업으로의 이전을 위해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를 재도입하여, 등록특허 등 일정요건*을 갖춘 지식재산의 이전·처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허용

- *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저작권 등으로 대상을 제한(상표, 디자인 제외)하거나,
또는 국가연구개발과제로부터 발생한 특허로 지원대상을 한정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시 세액공제비율을 현행 7%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25%) 수준으로 확대

☐ 소관부처 및 관련법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6.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 현황

- 최근 들어 기업들은 기술유출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산기협)
 - *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금액 : 4.2조('09) → 5.0조('10)
 - * 기술유출 1건당 피해금액 : 9.1억('08) → 10.2억('09) → 14.9억('10)
- 기업들은 기술유출 방지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보안시스템 구축 미비로 인해 기술유출 피해 확대 가능성이 존재(산기협)

□ 문제점

- 정부는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투자를 유인하고 있으나, 안전설비 투자로 분류되어 세액공제율이 낮고(3%),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개선방안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설비를 R&D 활동으로 간주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범위에 포함(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조문은 그대로 유지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규정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 관련법규 및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5조

7. 중소기업 연구전담인력 연구활동 소득세의 비과세 확대

□ 현황

- 임금처우 등의 이유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역량 있는 신입 연구원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직률 또한 높게 나타남
-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에 근무하는 R&D 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전담인력에 한해 연구활동비 등에 대해 월 2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이 많지 않은 실정

□ 문제점

- 이공계 기피문제 개선과 더불어 연구원 사기저하에 따른 대응의 일환으로 연구원 소득세 비과세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1996년 초 자본재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였으나, 2000년말 일몰적용으로 폐지 (근속년수에 따라 급여액의 10~30% 소득공제)
 - * 2003년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 한정하였던 급여액 일정비율에 대한 연구원 소득세 비과세제도 적용대상에 중소·벤처기업 연구소를 추가하였으나, 2006년 일몰적용으로 폐지

□ 개선방안

- 연구전담요원 근속년수에 따라 급여합계액의 일정비율에 대해서 소득공제
 - * 근속년수 5년 미만 10%, 근속년수 5년 이상~10년 미만 : 15%, 근속년수 10년 이상 : 20%

□ 소관부처 및 관련법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8. 기업 연구소에 대한 교통 유발 부담금 면제

□ 현황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체증 유발 주체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연구소에도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음
- 기업연구소의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어, 도시의 규모에 따라 0.74~0.90의 교통유발계수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 문제점

- 기업연구소와 동일하게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정연구기관과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기업연구소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음
- 최근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논의에 따라 기업연구소에 대한 부담금이 현행 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 존재
 - * 서울특별시 : 1m²당 부담금 350원→1,000원으로 인상 요구
 - 한국교통연구원 : 1m²당 부담금 350원→350~1,000원으로 차등인상 의견

□ 개선방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업연구소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가 어려운 경우, 기업연구소의 교통유발계수를 현행 수준보다 낮추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 * 교통유발계수를 0.74~0.90 → 0.24~0.47(공장시설)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 관련법규 및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9. 수도권내 대규모 기업 연구소 건축시 과밀 부담금 면제

□ 현황

- 기업들은 우수인력 확보, 대학 등과의 연구협력 등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 대형 연구시설을 설립하는 추세
-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가목의 1)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가 인구집중 유발시설물로 분류되어 과밀부담금을 납부토록 규정
 - * 2만 5천m² 이상 기업연구소 신·증축時 건축비의 약 10% 금액 부과
- 프랑스, 일본 등은 수도권 과밀 부담금을 폐지
 - * 일본 : 기성 시가지 공장제한법('02), 공장재배치 촉진법('06) 등 2000년대 들어 수도권 규제법률 폐지
 - * 프랑스 : 수도권 과밀부담금제 폐지('82)

□ 문제점

- 수도권내 대형 연구센터 설립시 기업부담 가중
 - * A 전자(주) 사례 : 서울 '가산 R&D 캠퍼스' 신축시 70억원 납부('07), 서울 '서초 R&D 캠퍼스' 신축시 78억원 납부('09)

□ 개선방안

- 수도권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

□ 소관부처 및 관련법규

-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10. 서비스 R&D 인증제도 도입

□ 현황

- 2011년 이후 정부는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 의료 및 보건, 교육, 문화서비스 등 11개 산업을 대상으로 기업연구소 인정제도를 도입('11. 7)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의 범위에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추가하여 R&D 조세지원의 대상에 포함('11. 12)

□ 문제점

- 서비스 R&D 성과물의 신뢰성·안정성 확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인증제도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NET(신기술), NEP(신제품) 등 기존 인증제도의 경우 제품기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영역 기술 및 서비스 관련 융·복합 기술은 제외되어 있음

□ 개선방안

- 기존 인증에서 다루지 않는 서비스 분야 R&D 성과물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도입
 - *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서비스 콘텐츠 등
- 의료, 문화, 관광, 교육분야 콘텐츠, 제품과 서비스의 융·복합 등 기존 인증에서 다루기 어려운 R&D 영역을 대상으로 인증제도 도입
 -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존 서비스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연구성과, 기존 서비스 대비 기술성·경제성 등이 현저히 향상된 것 등

□ 소관부처 및 관련법규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